

2022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사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 경사(1교시) 시험 과목 : 형법(06), 해사법규(03)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 법

1. 다음 중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 후 여러 차례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중간시법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형이 경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라도 공소시효의 특성상 범죄시에 적용되었던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제1항).’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한다.

2. 다음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으나 빗나가 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 ②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는데 乙은 丁을 丙으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甲은 丁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 ③ 甲을 乙로 오인하고 살해하려고 총을 쏘아 甲이 사망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동일하다.
- ④ 甲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乙에게 잘못 배달되어 乙이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乙에 대한 살인 기수죄가 된다.

3. 다음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불가능하다.
- ② 우리 형법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4. 다음 <보기>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
- ㉣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보기>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 ㉡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 부작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던 경우, 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물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 ㉣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6. 다음 <보기>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징계권자의 정당한 징계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 ㉡ 甲이 고가의 명품코트 소유자인 A의 진지하고 적법한 승낙을 받아 이를 훼손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乙이 몽둥이로 甲의 손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다음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성립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하여야 한다.
-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허가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8. 다음 중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
- ③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
- ④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9. 다음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 ② 해적인 피고인들이 두목의 사전지시에 따라 해군의 구출작전에 대항하여 선원들을 뱃브리지로 세워 해군의 위협사격을 받게 하여 ‘인간방패’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모의는 하였더라도 선원들을 뱃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 ③ 범죄단체조직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결지에 갔으나 반대파 조직에게 보복을 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이 여러 대의 차에 분승하여 출발하려고 할 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에 해당한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기타의 신체 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패싸움 중 한 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인정된다.

10. 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아살해, 특수체포, 존속협박, 인질치사는 모두 미수처벌 규정이 있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 ③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 ④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1. 다음 <보기>의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도주원조죄, 폭발물사용죄는 모두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 정범이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 ㉣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 (X) ㉡ (O) ㉢ (X) ㉣ (O)
- ② ㉠ (O) ㉡ (O) ㉢ (X) ㉣ (O)
- ③ ㉠ (X) ㉡ (X) ㉢ (O) ㉣ (X)
- ④ ㉠ (O) ㉡ (O) ㉢ (X) ㉣ (X)

12.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이 아닌 즉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 ②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기수시점이다.
- ④ 「형법」 제276조제1항의 체포죄는 일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계속범이 아니다.

13. 다음 자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
- ② 범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처벌받는 경우, 범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범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 ④ 「형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14. 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②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③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 ④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5. 다음 과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실범에 관한 이른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는 행위자가 경계의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미리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②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 ③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④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으로는 「형법」 제171조 중실화죄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 다음 <보기> 중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단순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 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되며, 그 대향범인 비밀누설을 받은 자는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된다.
- ㉢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어야 한다.

-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17. 다음 중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므로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해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탈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기까지는 어렵다.
- ③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사항을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 입장이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사람에게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수죄인가는 보호법익과는 관계없이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을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③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19. 다음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②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 ③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④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0. 다음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익사직전의 아이에 대한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② 어떤 범죄가 작위와 동시에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 행위자가 작위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침해 상태를 부작위에 의해 유지하였더라도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타당하다
- ③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④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1. 다음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 ②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④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22. 다음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②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③ 사람을 살해한 후에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다면 살인죄 외에도 사체유기죄가 성립한다.
- ④ 조산원이 분만이 개시된 후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3. 다음 <보기> 중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甲은 피해자A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의도치 않게 동 행위로 인하여 A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A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범행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시간 뒤 행인에게 구조되었다.

- ①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② 甲이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 A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기죄가 성립한다.
- ③ 만일 A가 집에 돌아가서 수치심과 절망감에 휩싸여 몇 주 뒤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甲을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④ 사안을 달리하여,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향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24. 다음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고노동자 등이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등에 낙서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별도로 계란 30여 개를 건물에 투척한 행위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③ 수확되지 아니한 쪽파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쪽파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일정 기간 후 임의처분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간 후에 그 제3자가 쪽파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5. 다음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 ②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 ③ 야간에 아파트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 대상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창문을 열어 보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26. 다음 <보기> 중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진 경우
- ㉡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걸을 더듬은 경우
- ㉣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7. 다음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재산상 은닉’에 해당한다.
-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④ 강제집행면탈죄는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면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

28. 다음 중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자가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별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④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사람을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9. 다음 중 범인은닉·도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는 그 자체로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② 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며,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0. 다음 <보기> 중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불법 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②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과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
- ③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④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32. 다음 중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 행위
- ③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 ④ 선착장에 대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하는 행위

33. 다음 <보기> 중 횡령과 배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옳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
-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실행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 (X) ㉡ (O) ㉢ (X) ㉣ (X)
 ② ㉠ (X) ㉡ (X) ㉢ (X) ㉣ (O)
 ③ ㉠ (O) ㉡ (X) ㉢ (O) ㉣ (O)
 ④ ㉠ (O) ㉡ (O) ㉢ (O) ㉣ (X)

34. 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②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 ③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면,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 ②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물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물시켰더라도 매물의 결과 발생 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선박매물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③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과괴죄가 성립한다.
- ④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6. 다음 <보기>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 ㉡ 검찰의 고위간부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 ㉢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다음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인 공범자만을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위증죄에 있어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전의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로 한다는 것이고,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3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 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39. 다음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 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 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③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④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관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관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계로서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②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 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국가 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도 않는다거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이 보관 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 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 사 법 규

1.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상 어업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이를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②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 ③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은 어업권과 별개로 본다.
- ④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 ②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 ③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 ④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3.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가어항 ② 어촌정주어항
- ③ 마을공동어항 ④ 지방어항

5. 다음 중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만용역업에 속하는 행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에 음료, 식품, 소모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행위
- ②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③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④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6.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해상구조물의 파손으로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 ③ 해양경찰관은 항만 및 항만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이동·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수역에서 선박의 화재로 선박등이 침몰할 위험에 처하여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경고, 이동·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7.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 ② 해상교통량의 밀도
- ③ 조종성능
- ④ 선박의 운항거리

8.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수면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도 선박의 위치를 통보해야 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및 흘수제약선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 예인선열의 길이가 300미터인 예인선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보기>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등록 후 ()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 출발항으로부터 ()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시운항허가 기간은 ()일이다.

- ① 21 ② 23 ③ 25 ④ 28

10.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은 유효한 레이더 탐지 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대상해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해역
 ②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수상구역
 ③ 「해사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④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

11.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광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두고,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지역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④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업”이란 해상에서 어선·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특정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以南)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③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을 할 수 있는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④ “조업한계해역”이란 북한 및 러시아 등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인접한 동해특정해역의 이동(以東)해역 및 서해특정해역의 이서(以西)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13.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해체의 신고 등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육지에서 선박을 해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4. 다음 중 「낙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낙시어선업자에게 영업시간이나 운항 횟수의 제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
- ② 시장·군수·구청장
- ③ 관할 지방경찰청장
- ④ 시·도지사

15. 다음 <보기>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어선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낙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승선시켜야 한다.
 - ㉡ “㉠”의 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낙시어선업의 영업을 하거나 출항 신고시 13명 이상이 승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 낙시어선 안전요원은 선장 또는 선원으로 한다.
 -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 구조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낙시어선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
 - ㉤ 낙시어선 안전요원은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선박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선박화재 발생시 기적 또는 사이렌을 장음으로 5회 울려야 한다.
- ④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항공기가 이함(離艦)을 하는 경우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④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18. 다음 중 불법조업선박 단속 및 정선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법」을 동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 어업 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상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영해에서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19.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국제통수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선박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고자 하는 선박
- ④ 국제항해에 종사하려는 선박으로서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

20.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권리행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 ② 외국과의 협정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법령은 대륙붕의 인공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
-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 또는 상공비행, 해저 전선 또는 관선 부설의 자유를 누린다.
- ④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추적권의 행사, 정선·승선·나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1.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통항분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출입하여야 한다.
- ㉡ 통항분리수역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뿐만 아니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도 통항분리 수역의 연안 통항대를 따라 항해할 수 있다.
- ㉣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 받는 검사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임시검사 ② 정기검사
- ③ 중간검사 ④ 특별검사

23.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길이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길이 ()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항행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시 기적 신호 단음 ()회를 행하여야 한다.
- ㉣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 ()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 ① 35 ② 36 ③ 44 ④ 45

24.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의 구멍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추 것
- ② 구멍조끼 중 승선 정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조끼는 소아용으로 갖추 것
- ③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멍조끼를 갖추 것
- ④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 것

25.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사용
- ② 해양과학 조사
- ③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의 개발·보존
- ④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26.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예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등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2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의 발생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심판하는 곳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②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④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28.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 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한다.
 - ④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29.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을 위반한 선박이 고지된 담보금을 납부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나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 ③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일반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안된다.
 -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교육실습 등 목적을 위하여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의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0.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상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려는 외국인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허가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1.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어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어선은 풍랑특보 발효시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안전조업본부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32.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 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 ㉤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3.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상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입어자
- ② 어업자
- ③ 어업인
- ④ 어업종사자

34. 다음 <보기>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선의 검사 종류로 규정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정기검사 ㉡ 중간검사
- ㉢ 특별검사 ㉣ 임시검사
- ㉤ 안전검사 ㉥ 건조검사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35.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개발사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항시설사업
- ② 어항기본사업
- ③ 어항환경개선사업
- ④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36. 다음 <보기>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내비상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과 계속 ()으로 한다.

- ① ㉠ 4분의 1, 12시간
㉡ 5회의 장음, 1회의 단음
- ② ㉠ 4분의 1, 24시간
㉡ 7회의 단음, 1회의 장음
- ③ ㉠ 3분의 1, 12시간
㉡ 5회의 장음, 1회의 단음
- ④ ㉠ 3분의 1, 24시간
㉡ 7회의 장음, 1회의 장음

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0킬로미터 ② 10해리
- ③ 12킬로미터 ④ 12해리

38.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총톤수는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 ② 한국선박은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않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해할 수 없다. 다만, 선박을 시험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9.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상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 및 선령 30년 이상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은 제외한다]의 제1종 중간검사의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기검사 전후 3개월 이내

②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의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③ 정기검사 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④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

40.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선령”이란 선박이 건조(建造)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 “검사기준일”이란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안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나눈다.

㉣ 원양구역은 모든 수역을 말한다.

㉤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는 「선박안전법」 제17조의 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